

---

## 쿠바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불평등: 물자부족경제와 개혁의 산물

카트린 한싱·우에 오펜회겔

카트린 한싱: 뉴욕시립대학교 인류학·사회학과 부교수, 플로리다국제대학교 쿠바연구소 부소장 역임  
우에 오펜회겔: 함부르크대학교 정치학 박사

---

원제와 출처: Katrin Hansing and Uwe Optenhögel, “Cuba: las desigualdades se tornan visibles. Consecuencias de la economía de escasez y reformas”, en *Nueva Sociedad*, No. 255, enero-febrero de 2015, pp.4-18.(traducción del alemán de Mariano Grynszpan)

핵심어: 불평등, 쿠바혁명 후 개혁, 개혁, 라울 카스트로, 버락 오바마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쿠바의 사회주의는 소련 해체 이후에도 붕괴되지 않았다. 50년에 걸친 미국의 봉쇄 역시 쿠바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쿠바 정책을 바꿨고, 2014년 12월 17일 양국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게 되었다.<sup>1)</sup> 쿠바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권을 수호하였고, 주도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중이다. 현재, 체제 변화는 쿠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1) Carlos Alzugaray, “Cuba y Estados Unidos: algunas claves de un viraje radical”, en *Nueva Sociedad*, No. 255, enero-febrero de 2015, pp.19-24.

이제 쿠바에서는 종업원을 거느린 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고, 농업생산용 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으며, 개인도 차량과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생산자는 생산물을 국가에 팔거나 관광업소에 직접 내다 팔 수 있다(바꿔 말해서, 예전에는 정부 기관이 상업을 독점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간섭이 사라졌다). 오랜 동안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주변의 실용주의 옹호자들이 추진하는 자유화는 심각한 사회적 모순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약 2년 전부터 쿠바 정부는 여행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극소수만이 여권발급 비용과 비자발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자동차 시장의 자유화 이후, 일반인도 수입 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언론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푸조 중급 모델이 미화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에 이른다.<sup>2)</sup>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0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차를 구매하는지, 상상조차 쉽지 않다. 쿠바 교육시스템은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성과로 칭찬이 자자했는데, 이제는 사립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졌다. 현재 아바나에서는 아이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유치원이 인기인데, 한 달 원비가 약 100달러이므로 노동자 평균 월급 5개월 치와 맞먹는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갈수록 심각한 문제는, 쿠바 공산당 지도부가 아직도 ‘냅은’ 실천에 매달려 있으며, 사회주의 모델의 현실화에 매진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sup>3)</sup> 근대화 과정은 “급하지 않게 그러나 중단 없이”<sup>4)</sup>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서구 언론은 경

2) “Precios para carros nuevos en Cuba”, en *Havana Times*, 3/1/2014.

3) Raúl Castro, “En Cuba nadie quedará abandonado a su suerte”, en *Cuba Debate*, 29/10/2010.

4) “Raúl Castro: ‘En Cuba no permitiremos terapias de choque’. Discurso del General de Ejército Raúl Castro Ruz en la clausura del Segundo Periodo Ordinario de Sesiones de la viii Legislatura de la Asamblea

제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래전부터 필요한 조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는 상당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다. 길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평등한 사회는 최근 25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담론은 개혁의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모색

쿠바의 사회 분화는 라울 카스트로의 개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를 이끌던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하루아침에 소련이 해체되었고, 쿠바는 홀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그때부터 중앙집중적 계획 경제의 취약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조 개혁이 불가피했지만 피델 카스트로는 차일피일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부터는 이미 단행한 개혁 조치 중 일부를 철회하여 원상으로 되돌려놓기도 하였다. 피델 카스트로는 1990년대에 시작된 위기를 소련 해체라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으나 만성적인 쿠바 경제위기는, 현재 라울 카스트로가 파악하고 있듯이, 경제 모델의 비효율성 탓이었다. 이 점에 대해 라울 카스트로만큼 과감하게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이를테면, 2010년 12월 인민권력전국회의(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에 참석한 라울 카스트로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침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sup>5)</sup>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Nacional del Poder Popular, en el Palacio de Convenciones, el 21 de diciembre de 2013, Año 55 de la Revolución”, en *Cuba Debate*, 21/12/2013.

5) Mauricio Vicent, “Raúl Castro: ‘O rectificamos o nos hundimos’”, en *El País*, 18/10/2010.

2011년 4월 개최된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Congreso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에서 라울 카스트로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당 내외적으로 오랜 공개 토론을 거쳐 ‘당과 혁명의 경제사회정책노선’(Lineamientos de política económica y social del Partido y la Revolución. 이하 ‘노선’이라고 약칭한다)이 확정되었다. 이 문헌은 일종의 로드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가, 협동조합, 민간 부분 사이의 균형 유지이다. 쿠비는 혼합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개혁은 사회주의의 살려내기이다. 결코 사회주의를 약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은 아니다. 개혁은 한편으로는 수공업 부문과 소기업의 민영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 생산(국가로부터 장기 사용권을 획득한 땅에서)과 판매의 민영화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에 집중된 결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에 따르면, 국영 대기업은 운영 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누릴 것이다.

토지 분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과 병행하여 협동조합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원(배급표, 국영기업식당 등)은 대폭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구조는 미래에도 여전히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요 생산수단은 국가 수중에 남을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이라는 국가후원주의(paternalismo) 관념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국영부문의 노동력 ‘해방’은 임금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2) 국영기업의 극히 낮은 생산력은 향상될 것이다. 3) 신규 민간 부문과 협동조합은 노동력을 흡수하며, 재화의 공급과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것이다. 4) 신규 자영업자는 납세를 통하여 국가 재정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5) 개혁 조치로 농업생산력은 급속히 제고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농산물(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이다)을 대체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승인된 로드맵은 이미 노동시장(불완전고용이

만연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에 적용되었다.<sup>6)</sup> 2011년 4월까지 국가에 고용된 50만 노동자가 ‘해방’되었으며, 이 수치는 2015년에 이르면 13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쿠바의 노동인구가 49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목표치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쿠바의 전문가들조차 일자리를 찾는 이 노동자 대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쿠바 정부가 허용한 자영업은 21세기 업종이라기보다는 19세기 업종이다. 서서히 이 목록을 확장해서 현대의 업종을 포함할 것이다. 노동력 재분배는, 예상보다 훨씬 느린 속도가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 노동조합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11년에 약 80만 명의 피고용자가 노동력 재분배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

수공업, 소기업, 서비스 부문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08년 14만 5천 명에서 2014년 7월 현재 약 47만 명으로 증가했다.<sup>7)</sup> 그러나 추세가 꺾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다. 원래 목표는 2015년까지 자영업 부문의 고용을 전체 고용의 약 35%까지 늘리는 것이었고,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 정도로 잡았다.

이 부문 개혁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추가조치 시행이다. 이런 추가 조치는 신규 소기업과 소상공업의 원활한 활동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여기에는 신용한도 설정,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규정, 수출입 관련 조치, 도매시장 개설, 창업 교육, 은행시스템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된다. 이런 과정은 지나치게

6) 쿠바의 불완전고용, 실업, 생산력에 대한 뛰어난 분석은 다음 글 참고. Carmelo Mesa-Lago, “El desempleo en Cuba: de oculto a visible. ¿Podrá emplearse el millón de trabajadores que será despedido?”, en *Espacio Laical*, No. 4, 2010.

7) “Nearly 500,000 Cubans Are Self-Employed”, en *Fox News Latino*, 25/8/2014.

복잡해서 수많은 신규 사업자는, 자유화도 하기 전인데 제약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 분야의 개혁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만약 공급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항구적인 공간이 마련된다면 쿠바는 진일 보할 것이다. 그렇지만 목표가 혼합경제, 즉 부분적으로만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구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기업 환경과 거시경제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수립, 혼합경제에 적합한 노동법 제정(자본주의 임노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재편(노동조합이 민간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조세제도 마련, 이중화폐제도의 단일화, 포괄적인 성장전략 채택(국가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달성되었다.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마련되어 협동조합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또 자유로워졌다. 지금은 산업체와 서비스업 부문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농업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2014년 6월부터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이제 막 등장한 민간 부문의 노동관계 법제화에 꼭 필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노동자와 고용자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극히 모순적인 면이 없지 않은데, 노동관계의 파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쿠바에서 노동분쟁이 생길 경우, 사회적 중재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3년 말에 이중통화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기업 부문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몇몇 기업은 공식 환율(1쿠바페소 = 1

태환페소)과 다른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sup>8)</sup> 관건은 쿠바 기업의 경쟁력 지표와 실제 물가 지표 확보에 있다. 단일통화제도로 복귀는 개혁의 이정표이자 세계경제에 통합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사회적 분화와 차별이 심화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현실화’를 평가하자면, 먼저 일반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의 모델이라고 부른 편이 더 적절할 듯하다. 다음으로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선제적인 자유화보다는 정치적 통제가 우위에 있다는 암시이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중단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사치가 가능한지 현실이 증명할 것이다. 2014년까지 시행된 조치는 아직도 의미 있는 거시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쿠바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2.0%에서 3.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평균 성장률(약 4%)을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이런 성장률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어렵다.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없이 국내 채원만으로 개혁을 완수할지도 모르겠으나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 때 아시아 국가들의 역동성(7%에서 12%의 성장률을 보였다)을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 사라진 신화

비효율성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에서 생겨났다. 쿠바혁명 후 엘리트와 인민은 일종의 계약을 맺고, 정치적 충성과 국가의 독립, 사회적 보호, 빈곤추방을

8) 현재 쿠바에서는 법인거래에 적용하는 태환페소와 쿠바페소의 공식 환율이 있고, 그 밖의 경제에 적용하는 환율이 있다(1태환페소=25쿠바페소). 쿠바 정부의 목표는 이러한 이중통화제도 폐지인데, 곧 시행될 것이다.

맞교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런 점은 각종 사회보장이라는 쿠바혁명의 옛 상징에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런 계약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쿠바 사회의 결속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강화한 요인인데, 경제적 궁핍으로 허물어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과 교육의 질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라울 카스트로는 야심적인 사회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총생산에서 교육, 보건,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우선 배정으로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덧붙여, 사회적 배제도 증가하고 있다. 피고용자와 은퇴자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주의권의 붕괴 직후에 실시된 쿠바 경제 재편은 현저한 구매력 상실로 이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때 사용한 정책 수단은 화폐발행이었다. 1990년에서 1993년까지(이름하여 ‘평화시대의 특별기’) 인플레이션율은 183%에 달했는데, 동 기간 임금과 연금은 불변이었으므로, 개인 몫을 빼앗아 국영기업과 사회보장혜택을 유지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sup>9)</sup> 이 때 도입한 달러화 경제는 2004년 이중통화제도로 실시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이중통화제도야말로 사회 분화의 출발점이었다. 임금은 쿠바 페소(태환페소보다 구매력이 낮다)로 받는데 일상적인 소비는 대부분 태환페소(CUC)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상황이 일반인보다 훨씬 좋았다. 게다가 쿠바페소는 가치가 대폭 하락했다. 2010년 실제임금은 1989년의 약 27%에 불과했다.<sup>10)</sup> 달러화나 유로화 같은 경화(硬貨)에 접근할 수

9)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글 참고. Pavel Vidal Alejandro, “Desafíos monetarios y financieros”, en P. Vidal Alejandro y Omar Everleny Pérez Villanueva (eds.), *Miradas a la economía cubana. El proceso de actualización*. Caminos, La Habana, 2012.

10) Ibid.



있는 사람은 해외 동포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특정 경제 부분(관광, 무역, 암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해외송금이나 비공식 경제활동이나 개인적인 경제활동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공식 경제 종사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하여 임노동은 갈수록 하층계 여겼고, 결국 갖가지 명목의 인센티브답지 않은 인센티브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쿠바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가 바뀌었는데, 식당종업원, 택시기사, 호텔객실 청소담당 여성이 의사나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전문직 종사자가 수입이 좋은 직업을 찾아 나서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외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지만, 쿠바 사회는 1990년부터 사회구조 내에서 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의 동질성을 상실하였다.<sup>11)</sup> 이 시기 피델 카스트로의 방침은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였다. 지금은 비록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할지라도 혁명세대에게 이 원리는 정체성의 일부였다. 교육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생성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태환폐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빈곤에 떨어질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독거노인, 독신모(single mom), 아프리카계 쿠바인이었다.<sup>12)</sup> 이리하여 사회 불의, 종족 장벽, 기타 온갖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포용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였다는, 이른바 열대(쿠바) 사회주의 신화는 사라졌다.

11)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를 보면, 쿠바는 1980년대 말 0.24에서 1990년대 말 0.38로 상승했다. 현재는 0.50까지 상승했다고 추정하는데(쿠바 정부는 공식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 참고. Mayra Espina, “Viejas y nuevas desigualdades en Cuba. Ambivalencias y perspectivas de la reestratificación social”, en *Nueva Sociedad*, No. 216, julio-agosto de 2008, pp.133-149.

12) Ibid.

## 아프리카계 쿠바인: 인종불평등으로 회귀

쿠바혁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그룹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계 쿠바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바뀌 말해서, 사회경제적 분화 과정 역시 종족과 계급이라는 분할선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혁명 전 쿠바 정치에서 중요한 현안이었던 종족과 계급의 문제가 현재 쿠바에서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현 상황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9년 혁명 이후 쿠바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구성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처음 이주 물결은 대부분이 백인 엘리트와 부르주아였다. 이들은 폴헨시오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을 지지했고, 혁명 세력에 맞섰다. 그 이후의 이주 물결은 종족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동질성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백인이 압도적이었다. 이 결과, 쿠바를 떠난 이주민이 쿠바 주민보다 훨씬 더 하얏다.

라울 카스트로의 개혁 방향 때문에 이런 사실의 잠재적인 폭발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개혁의 주요 수혜자는 자본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 돈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고, 주택과 차량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 거주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해외송금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자본이나 정치적 자본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개혁의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해외 이주민의 구성 때문에 현재 쿠바로 송금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백인이다. 따라서 송금한 돈의 수혜자는 쿠바 백인 가정이다. 금액 면에서 보면, 생존과 쿠바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액수이다.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매년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튼, 경제 기여도의 면에서 해외발 쿠바 송금은 전통적인 생산품(립주, 담배, 설탕)을 상회하며,

주요 수출품인 니켈(14억 달러)에<sup>13)</sup> 맞먹는다. 역설적으로 쿠바 정부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조국을 버린 배신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의 호의에 적잖이 의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 해외발 쿠바 송금은 경제개혁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쿠바는 아직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민간 부문의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해외발 쿠바 송금이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의 돈줄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현재가 역동적으로 작용한 결과, 현재의 특혜층은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이다. 반대로, ‘못 가진 사람들’은 대개 아프리카계 쿠바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 그룹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없었으므로 수많은 아프리카계 쿠바인은 차츰 예전과 같은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 현재의 쿠바: 초국적 사회

쿠바 사회주의의 사회 기반 변화에 관련하여, 해외 이주민은 중요한 요인인데, 단지 해외발 쿠바 송금 때문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쿠바의 해외 이주민은 마이애미에 국한되지 않고 멕시코시티, 마드리드, 산토도밍고, 키토, 토론토 등, 각지에 퍼져 살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세계화된 이주민이다.

1959년부터 100만 명이 넘는 쿠바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플로리다 주 남부, 특히 마이애미에 살고 있다. 쿠바 망명자들은 특출한 사업

13) 이 수치는 아바나컨설팅그룹(The Havana Consulting Group)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쿠바통계청(ONE)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다.

감각과 미국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덕분에 조용한 해변 지역을 이내 현대적인 상업중심지로 바꾸어놓았다. 또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를 만들었는데, 목적은 경제 봉쇄를 통해서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쿠바혁명 이후 30년 동안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냉전 시대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쿠바인도 플로리다 해협을 두고 이쪽저쪽으로 갈라져서 대립했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차이, 경제봉쇄, 양국 사이의 깊은 감정적 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쿠바는 예전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일면, 이러한 변화는 쿠바의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설명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특별기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이주민의 머리와 가슴에 와 닿았을 뿐만 아니라 호주머니를 털어서 쿠바에 살고 있는 동포를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다.

수많은 망명자는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가 살아있는 한 쿠바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제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던 친척, 친구, 옛 이웃에게 선물과 돈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로써 플로리다 해협 양안에 사는 수많은 쿠바인에게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특별기 이후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쿠바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들 전부가 미국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경제적 이유로 쿠바를 등진 것이지 정치적 망명은 아니었으므로 쿠바에 사는 친척과 친구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지냈다. 그 결과, 광범위한 초국적 관계가 생겨났다. 가족을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등 최근 25년 동안 각종 사회적·문화적·종교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긴장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런 과정은 최근 쿠바 정부의 여행자유화 조치(이제 쿠바인은 누구나 사전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종종 다른 나라에 가서 몇 개월씩 일하고, 경화로 저금하여 쿠바로 돌아오기도 한다.

왕성한 초국적 교류를 목격하려면 마이애미나 아바나 공항에 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매주 100여 편의 전세기가 두 도시를 오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이제 미국 정부의 ‘통 큰 정치’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수많은 국가가 쿠바와 관계를 강화하거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유럽 연합 소속의 여러 국가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쿠바와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게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압력으로 미주기구에서 배제되었는데, 이제는 미주기구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지역기구에 동참하고 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 및 ‘우리 아메리카 인민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의 여러 국가하고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새로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한 브라질하고도 경제적인 면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쿠바 관계 개선 결정은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현재 쿠바계 미국인의 여러 기관(기업과 대학을 포함하여)은 쿠바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쿠바 정부를 비판하는 만큼 미국의 대쿠바 고립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 지가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실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다른 한편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양국 관계에 자연스

14) BBC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지는 5주 연속하여 주말판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쿠바 관련 사실을 게재하였다. 사실의 주요 내용은, 1960년부터 유지해온 대쿠바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삭제하며, “은밀한 쿠바 정부 전복 기도”를 중단하고, 1961년 이래 중단된 최상급 외교관계를 복원하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지에 게재된 5개 사실은 다음과 같다. “Tiempo de acabar el embargo de Cuba”(2014년 10월 11일자), “La impresionante contribución de Cuba en la lucha contra el ébola”(2014년 10월 19일자), “Los cambios electorales respecto a Cuba”(2014년 10월 25일자), “Un canje de presos con Cuba”(2014년 11월 2일자), “En Cuba, desventuras al intentar derrocar un régimen”(2014년 11월 9일자).

러운 해법이 등장했다. 아바나와 마이애미의 구세력이 이미 무대에서 퇴장함으로써 이제 양국관계의 운명은 실용적이고, 나이는 더 젊고, 상대에 대한 원한은 더 적은 사람들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상은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새로운 국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쿠바의 개혁으로 상당한 자본력을 갖춘 이주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경제적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 젊은 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

경제적 전망도 암울하고 또 암시장에 종사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쿠바 젊은이는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되묻고 있다. 현재 쿠바 인구 1,120만 가운데 75%가 넘는 사람들이 혁명 이후에 태어났고, 55%가 넘는 사람들이 35세 미만이다. 이런 젊은이들은 할아버지 세대(많은 사람이 혁명을 위해 싸웠다)나 아버지 세대(소련이 지원하던 황금기에 성장했다)와는 다르게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하던 1990년대 생이다.

이러한 쿠바 젊은이들의 어릴 적 삶은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 쿠바 정부는 아직도 젊은이를 장래 혁명의 담지자라고 얘기하며, 여전히 체 게바라를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현실은 전혀 다르다. 알라마르(아바나 외곽에 위치한 쿠바 힙합

Thomas Sparrow, "Por qué The New York Times quiere que se acabe el embargo a Cuba", en *BBC Mundo*, 11/11/2014. [www.bbc.co.uk/mundo/noticias/2014/11/141110\\_eeuu\\_cuba\\_newyorktimes\\_editoriales\\_tsb](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4/11/141110_eeuu_cuba_newyorktimes_editoriales_tsb)

의 본고장)에서 시골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아이폰 같은 상품을 꿈꾸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이런 일은 쿠바 인구의 90%에게는 실현할 수 없는 꿈이다. 15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젊은 세대는 대개가 개인주의, 물질주의, 정치 무관심, 냉소주의 성향을 보이고, 또 집산주의 사회의 가치를 멀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보와 소비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이 수많은 쿠바 젊은이가 조국을 떠나거나 떠나기를 꿈꾸는지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관념은 “유토피아에 살고 있지 만 내 유토피아는 아니다”라는<sup>15)</sup> 구절로 집약된다. 쿠바혁명에 대한 부모 세대의 유대감은 찾아볼 수 없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도 사라진 것이다.

## 하나의 개혁, 두 가지 속도

수많은 쿠바인은 경제개혁이 조만간 정치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을 때, 쿠바의 고위급 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분명하게 뜻을 밝혔다.<sup>16)</sup> 자유화를 지나치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다 보면 사회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쿠바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당 지지 세력의 저항이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연설할 때마다 ‘사

15) 독일 언론인 페터 슈만이 2012년 1월 9일 라디오방송(Deutschlandradio Kultur)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제목(“Ich lebe eine Utopie, die nicht die meine ist.” Die Lange Nacht der cubanischen Dissidenz)에서 따온 것이다.

16) Philip Pulella, “Cuba Quashes Hopes for Reform as Pope Benedict meets Raul Castro”, en *Reuters*, 28/3/2012.

고방식의 변화'(공식 용어이다)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정 경제 부문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기업으로 이양하면 적지 않은 수의 당 중간간부는 권력을 잃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불분명한 점이 있다. 단순히 통제권을 지방과 기업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결정권과 책임까지 넘기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 풀어 말해서, 현재 쿠바에는 한 세대 전체가 결정권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오로지 결정에 동의하도록 교육 받았을 뿐이다.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수직적 구조의 일부로 편입된 공무원일 뿐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결정을 내린다거나 참신한 발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엄두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



도 내지 못한다. 현재의 유인책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암시장에서 보여준 임기응변과 조직력 및 부족한 재원을 합법적인 영역에 쏟아 부을지는 미지수이다. 무책임한 관료와 당 지도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일해야 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업무라도 떠맡아 하는데, 이들은 무조건 피하려고만 든다.

이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정책이 두 가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승인된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반면에 정치 분야의 경우 당 지지 세력과 중간간부는 아직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 쿠바 고유의 개혁 노선?

쿠바의 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개혁이 떠오른다. 이런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쿠바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환경이라는 점에서 쿠바의 상황은 아시아 국가나 동유럽 국가가 개혁할 때와는 완전히 상이하다.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경험하고(이러한 변화의 승자와 패자가 분명해졌다) 또 세계화가 야기한 불공평과 불평등을 목격한 현재, 신속하고 광범위한 시장 개방은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지속된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위기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으며, 쿠바의 구 세력에게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고, 실용적이고, 국제문제에 정통한 개혁과 사이에서도 서둘러 세계경제에 편입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생겨났다. 게다가 아바나에서는 아

시아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초래한 부작용, 즉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부패,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1990년대 초반의 동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쿠바의 개혁 속도는 현저하게 느리다. 마찬가지로 경제 개방의 범위를 보더라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아시아의 개방 범위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의 세계화를 고려할 때, 산업 복구라는 고전적인 방안도 쿠바로서는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보다는 세계시장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클러스터 방식(예를 들어, 생명공학기술 분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을 도입해야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발전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는 단 하나인데, 아직도 쿠바에 넘쳐나고 있다. 바로 높은 교육 수준이다.

아바나에서는 ‘질서 있는 이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쿠바 정부에 따르면, 이것이 혁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어떤 모델도 따라 하지 않고 고유한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울 카스트로가 제시한 실용주의 노선이 일관되게 적용될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구조적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성장 속도는 쿠바 주민이 개혁에 열광할 만큼 역동적이지도 않고 또 사회주의 사회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냐는 질문은 쿠바의 안과 밖에서 갈수록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개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당 권력 유지를 위한 단순 경제개혁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이었다면, 쿠바 사회가 새로 분화된 이후에 어떤 계층이 개혁을 지지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국가와 인민 사이의 혁명 계약(인민은 충성을 바치고, 그 대신 국가는 독립, 사회적 보호, 빈곤 추방을 보장한다는 계약)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정부 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쿠바혁명 50주년을 넘긴 현재,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실업은 증가하고, 사회보장 혜택은 곤두박질치고, 암시장은 활개 치고, 부패는 일상화되었다. 젊은 세대는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정치를 멀리하고 있다. 여러 새로운 사회계층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혁명 이전에 그랬듯이, 인종에 따라서 계층이 나뉘고 있다.

아무튼, 높은 교육 수준을 발판으로 이용하고, 또 쿠바인의 침착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습득한 임기응변 능력을 조합한다면 ‘현실화’는 경제적 난국을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위험도 떠맡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개혁의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어쩌면 지도부가 좀 더 대담하고 국민을 신뢰해야, ‘혁명은 오직 내부로부터 패배할 수 있다’<sup>17)</sup> 피델 카스트로의 2005년 경고성 발언이 현실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박병규 옮김]

17) 피델 카스트로가 2005년 11월 17일 아바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당 구절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나라는 저절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혁명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혁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라면 혁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잘 못할 것입니다.”(<http://www.cuba.cu/gobierno/discursos/2005/esp/fl171105e.html>) — 옮김이.